

남북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의 과제와 전망

주강현 / 민족문화연구소 소장, 문학박사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은 남북의 화해를 가져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사회 문화 분야는 기존의 통일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통일은 '제도와 제도'·'이념과 이념'의 통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기 때문에 사회 문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더욱이 민간 통일 운동이 확산되면서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은 중심 사업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오늘의 남북한 교류 협력에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에 대한 요구가 남과 북 모두의 필요성에 의하여 급증하고 있다. 정치·군사적 대립 관계가 온존하는 상태에서 북한은 개방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제한적인 개방 전략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 문화에 대한 교류 협력은 남북 양측의 욕구와 필요에 의하여 다변화될 전망이다. 사회 문화에 대한 전망은 통일 과정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의 우리가 꿈꾸는 모델을 세우는 데도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통일 사회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통일 국가 내에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내일의 문제이기도 하다.

머리말: 사회 문화 교류 협력과 남북의 화해

사회 문화 교류의 중대성은 어디서 기인할까. 정치·군사·경제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인식의 전환없이는 남북의 화해는 요원하다. 정치·군사·경제 문제는 곧바로 사회 문화 분야와 직결된다. 가령,

IMF 극복과 국방비 절감¹⁾ 남북의 동시 군축은 곧바로 사회 문화 분야에 결정적인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 또한 남북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과정은 비단 정치·경제·사회 제도의 통합은 물론이고 문화적인 통합까지 완료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닌다.

첫째, 사회 문화 분야는 기존의 통일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모든

1) 경실련 통일협회(1998. 2.19), 「IMF 극복과 국방비 문제」, 정책토론회 자료.

것이 온통 정치·경제 문제로만 인식되고, 그러한 인식에 기초해서만 논의되는 편향성을 극복해야 한다. 통일 문제의 사회 과학적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하여 인문적·문학 예술적 상상력이 고갈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관성과 편향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통일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둘째, 통일은 '제도와 제도'·'이념과 이념'의 통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라는 점이다. 자본주의·사회주의, 혹은 좌·우의 통일로 통일의 방향을 규정지을수도 없고, 그렇게 규정지어도 안된다. 민족 국가의 복원은 지난 100여년간 한민족의 최대의 소원이었다. 언어가 같고 식생활이 같다는 것은 단순한 문화적 동질성에 그치는 것일까. 사회 문화적 동질성은 단순히 남북이 같은 것이 많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민족중심주의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이 중심이 된 자주적 통일관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토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셋째, 통일 운동 자체의 대중적 전환이 요구된다. 오늘날의 통일 운동이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여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 접근이 절대적이다. 그간 관이 주도하고 독점하는 통일 운동에서 벗어나 민간 통일 운동의 서편이 고양되고 있다. 민간

통일 운동의 성장이야말로 우리 통일 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된다. 이같이 민간 통일 운동의 주체가 넓게 펼쳐지고 다원화되면 될수록, 사회 문화적 교류 협력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넷째, 오늘의 남북한 교류 협력에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에 대한 요구가 남북 모두의 필요성에 의하여 급증하고 있다. 정치·군사적 대립 관계가 온존하는 상태에서 북한은 개방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제한적인 개방 전략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 문화에 대한 교류 협력은 남북 양측의 욕구와 필요에 의하여 다변화될 전망이며, 방송에 대한 교류 협력까지 이루어진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남북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의 과제

남북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의 범주 문제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이라고 했을 때, 사회 문화의 범주는 종교, 학술, 교육, 언어, 의식주 생활, 민족 생활 풍습, 문학 예술(문학, 미술, 음악, 영상, 연극 등), 대중 매체, 여성 생활, 보건 의료, 교통·통신, DMZ 평화적 이용 및 통일 신도시 건설 등을 포괄적으로

망라한다.²⁾ 남측 기준에서의 범주는 다원성 그 자체인 데 반하여, 북측의 기준에서 보면 단순성 그 자체다. 사회 문화 교류의 범주는 남북이 남북합의서에서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을 명시한 대목인 제3장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³⁾

남측의 교류 협력 욕구를 가지고, 남측의 잣대를 기준으로 삼고서 전면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북측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체제와 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제한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제한성은 남북의 상이한 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 점을 남측에서 인지하고 교류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남북 사회 문화 교류 협력과 경제 문제

현재 시점에서 남북 사회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대개가 경제 문제와 관련을 맺는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 문제와 연관되지 않은 남북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틀림없다. 따라서 정작 북한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나 단체의 교류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북한의 처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나 단체의 교류 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교회를 세우면서 학교나 병원을 세운다거나, 식량 지원을 매개로 한 여타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다.

이남과 이북은 사회 문화 교류 협력에서 상이한 입장을 보여준다. 이남 사회는 일단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대북 진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고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북의 입장에서도 이남에 대한 개방 전략을 취함으로써 화해 분위기를 주도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늘상 문제는 이북의 개방 수위와 체제의 점진적 동화라는 '균형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북으로서는 대남 개방을 급격히 서두를 수가 없다. 제한된 범위에서 문을 열 뿐이고, 문을 열어놓는 순위는 오로지 이북의 필요성에 의해서다. 오늘의 남북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남북 교류 협력에서 경제 문제가 개입되는 측면은 남측의 경쟁에서 비롯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가령 언론사간에 경쟁이 붙으면서 일정한(어떤 경우, 엄청난 수준의) 경제

2) 통일사회문화공동체를 위한 연대(1998. 6.25), 「창립 선언문」.

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 2.19):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16조).

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방북을 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이같은 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견되며, 북측으로서는 일견 이같은 경쟁 심리를 충분히 이용·활용하는 방식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 운동 일각에서는 이같이 남북 교류 협력에 경제 문제, 솔직하게 표현하면 돈이라는 문제가 개입되는 것에 대하여 북을 비판하기도 한다. 기존의 통일 운동적 시각으로 보면 북에 대한 비판이 정당하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 안목에서 보면, 그러한 비판이 전적으로 객관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과당 경쟁에 의하여 거금을 주고 협상을 하거나 브로커 등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의 '추태'를 옹호할 필요는 없다).

시장과 국가의 관계에서 볼 때, 북이 경제 문제를 남북 교류 사업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북한 사회가 시장 경제를 취하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과거 구동독처럼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를 지니지 못한 북한의 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기존의 통일 운동 관점에서만 북을 비판함은 관념적으로는 타당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동떨어진 관념일 뿐이다. 오늘의 남북 교류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가 북한 개방의 현실적 제한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북 사회 문화 교류 협력과 일회성 문제

남북 사회 문화 교류 협력 역시 '사람과 사람'의 사업일 뿐이다. 정치·경제 교류 분야보다도 사회 문화는 '사람과 사람'의 사업임을 더욱 실감케 해준다. 오늘날 남북 교류 협력은 비밀주의와 한건주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 통일 운동을 압박하고 정부가 독점하겠다는 밀실협상주의는 남북 교류를 모두 비밀주의의 온상으로 만들었다. 북측에서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제한적인 보도를 원하는 마당에 남측 언론에 의한 공개 여부를 원하지도 않으며, 불신도 여전하다. 비밀주의는 한건주의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어떤 제도적인 남북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을 더디게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민간 통일 운동이 다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독점주의적 비밀주의를 청산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남북 사회 문화 교류 협력과 상호주의 문제

정부는 베이징 남북 당국간 대표 접촉(1998. 4.11~17)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 교류에서 상호주의란 의미가 없다. 더욱이 문화에서의 상호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울에서 전통 예술공연단이 평양을 갔다고 해서 반드시 평

양의 전통예술공연단이 와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남측의 공연단을 받은 대신에 남측에서는 이북의 공연 예술 비디오를 방영하고,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영화가 가고, 소설이 오고, 건축가가 오고, 패션 디자이너가 가면 될 문제이지 상호주의는 불필요하지조차 하다. 더욱이 이북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조건에서 남측에서 했으니 북측도 하라는 발상은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다만, 남북의 제도적인 정착에 의하여 쌍방향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상호주의는 가능할 것이다. 또는 경성-평양축구전같이 전통적인 상호주의 관례를 복원시킨다거나, 남북의 문화제를 상호 교환 전시함으로써 남북의 화합을 유도하는 데 적절하게 상호주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사회 문화 교류 협력과 여성 문제

남북 사회 문화 교류 협력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고시켜야 한다. 그동안 통일 논의는 대개 남성 중심 논의였다. 이 점은 남북이 공히 같다고 여겨진다. 정치·경제 분야가 아닌 사회 문화 분야에까지 남성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린이 교육과 탁아소, 노인층 복지, 여성 생활 등 남북의 여성 및 소외 계층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를 끌어안는 전진적인 자세가 요구

된다.

남북 사회 문화 교류 협력과 민족중심주의

‘국민의 정부’ 100 일을 넘긴 현재의 시점에서 판단할 때, 어느 분야보다 그런대로 남북 교류 협력이 이루어진 분야가 있다면 사회 문화 분야일 것이다. 최근에 경향신문사의 ‘한민족문화네트워크’를 통한 문화유산 사업을 위한 방북, 리틀엔젤스의 전통 문화 예술 공연 등 민족 문화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유일하게 성사되어 북측에서 수용하는 분야일 것이다.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과 개발은 경제적인 관광 사업이지만 어디까지나 금강산이라는 자연 환경을 매개로, 전통적으로 한민족이 소중하게 생각하던 금강산이라는 자연과 그 속에 담겨진 사찰, 전설, 인문의 행적 등을 망라한 문화 유산적인 포맷을 통한 문화 사업으로 여겨진다.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의 첫 단계에서 민족 문화가 선발로 앞세워질 수밖에 없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과 북의 냉전적 대결 심리 상태는 결코 완화되지 않았다. 남과 북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남북 민중들의 심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남북 민중의 생활을 옥죄이고 있다. 남측의 다원적 문화체계가 북쪽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북측으로서

는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북이 받을 수 있는 사회 문화 분야는 제한적인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제한성은 현재의 남북 교류가 갖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제한성이기도 하다. 북측에서는 사회 문화적 흡수 통일에 대한 우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측으로는 북측이 수용하기에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는 민족 문화 교류 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어 점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남북 사회 문화 교류 협력에서 민족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관점은 자주적 통일관을 상호 합의하는 데서도 중요하다. 시대가 변하면 풍습도 변하기 마련이고 북이나 남이나 전래 민족 생활사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남과 북이 갈라져 살아온 지 반백 년이 되도록 여전히 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야말로 '엄혹한 분단시대에도 살아남은 남과 북의 민족 생활사'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질화론자'들의 바램과는 달리 같은 것이 더 많고, 같은 것 가운데는 역시 민족 문화 유산에서 이어받은 것이 그 중심을 차지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민족 생활사가 남과 북 모두에게 중요한가를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민족 문화에 대한 강조

는 해외에 나가있는 수많은 동포들과의 연대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⁴⁾

셋째, 남북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은 통일 사업이지 '대북 사업'이 아닌 것이다. 말로는 통일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대북 사업', '이북 관리 정책'이란 인식을 저버리지 못하고 모든 관점을 이남만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교류 협력은 남과 북이 모두 필요한 사업이고, 그야말로 하나가 되자는 사업이므로 어느 일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를 잘 살피가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의 전망

남북 사회 문화 교류사의 점검과 평가

그동안 남북 사회 문화 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져왔을까. 지나간 발자취를 점검함으로써 앞으로의 전망을 도출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전망을 도출하기에 앞서 남북 사회 문화 교류의 양과 질은 미미하기 이를 데 없다. 일찍이 독일이 TV 채널을 비롯하여 대대적인 동서 교류를 지속시켜왔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다. 1990년 10월 제1회 뉴욕남북 영화제를 위시하여, 남북한 민족 음악 교류

4) 주강현(1997, 10.1), "해외 동포 사회의 민족 문화와 통일", 『통일』 2호, 미주평화통일연구소(빌라델피아).

(송년 음악잔치), 東京한겨레올림, 후쿠이국제예술제 등이 9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다.

첫째, 남북한의 정치적인 변동에 따라 사회 문화 교류 문제가 거론되었다. ① 정치적인 문제가 풀려나갈 때, 문화적인 교류도 풀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언뜻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스포츠·예술 따위의 교류가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남북 관계에서만은 그렇지 않다. 정치적인 문제가 경색되더라도 기왕에 진척되어온 문화 교류만큼은 정치 문제를 떠나서 늘 연속시켜낼 수 있는 남북한간의 사랑과 포용력·양보를 견지해나가는 제도적 창구가 중요하며, 교류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교류 사업의 장기 지속성이 요구된다. ② 정치적인 문제가 풀려나갈 때 문화 교류가 본격화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남북의 정치적인 경색과 무관하게 꾸준하게 상호간의 붓물을 트는 작은 만남이 이루어져왔음도 사실이다. 따라서 거창한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대화 채널을 늘 열어놓아야 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현재까지의 만남은 당국간 베이스에 의한 접촉이었다. 정상적이고 전면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려면 당국간 베이스를 뛰어넘는 접촉으로 확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어 가지 장애가 도사리고 있다. ① 이북에서는 민간 단체끼리의 교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북에 과연 순수 민간 단체가 있을 수 있는냐는 의문이 남측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북에서 제시한 순수 민간 단체라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남측의 참가 단체가 설령 민간 단체라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무작위 접촉은 금지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순수한 의미에서의 임의의 민간 단체는 없다. 현재 양측이 가지고 있는 견해 차이는 북한의 통일 전술적인 측면에도 기인하는 것이 있을 터이고, 남한측의 국가보안법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규정을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현재는 애매하기만 한 양측의 경계선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인내심을 발휘할 단계다. ② 남측으로 되돌아오면, 대북 교류의 욕구는 대단히 폭 넓은 분야에서 잠복되어 있는 데 반하여, 북측은 제한적이다. 이는 당국간 베이스조차도 극히 미미하고 산발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남북이 함께 교류할 대상과 내용을 넓혀봄으로써 서로의 필요성을 더욱 재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의 상이한 체제에 따라 생성된 문화를 강요하기 보다는 상호간에 이해 가능한 분야들, 가령 민족적인 것들이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교류의 난계를 높여나가는

자리매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지금까지의 남북 문화 예술 교류의 대부분은 중국·러시아·일본·미국을 위시한 우리나라에 영향력 및 관련이 있는 국가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분단의 아픔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남북한 민족 음악 교류가 보여주었듯이, 남과 북에서 휴전선을 직접 통과하여 행하는 교류야말로 대중적인 선전력을 포함하여 가장 강력한 통일 지향적 교류가 되어줄 것이다. 휴전선을 통한 직접 교류는 외세를 배제하고 남북이 한자리에 마주앉아야 하는 남북이 가장 원하고 있는 교류 방식이 되어줄 것이다.

남북 사회 문화 교류의 전망 몇가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다음, 사회 문화계는 남북한 교류에 대한 본격적인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부터 12일까지 평양봉화예술극장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리틀엔젤스단의 공연이 있었다. 경향신문이 주관하는 한민족네트워크 사업도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그밖의 음악제, 영화제 등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남북한 방송 교류에 관한 실천적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⁵⁾ 남한 사회 문화계의

동향을 보면 이전 정권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① 제반 기관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막는 일은 사라졌다. ② 북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도 실사구시적인 개별 단위의 사업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③ 심리적인 측면에서 자기 검열적인 태도가 많이 완화되었다.

위의 몇가지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가. ① 사회 문화계 인사들은 대북 교류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 사회 문화 교류에 관한 실제적 정보, 정책적 판단 등을 위한 정보가 요구된다. ② 민간 자율의 각개 약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③ 대북 교류에 관한 경쟁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공·부정의 두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다. ① 북한의 '선택적 태도'에 기인한다. '브로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 거래도 이루어졌으며, 북한은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② 대북 교류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동안 대북 교류를 통제만 하였지, 민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부재하다. 국가적 통제에 두지 않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나, 방송사 교류 접촉의 경쟁 사례에서 보듯 초기 단계에서는

5) 한국방송인총연합회·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1998. 6.11), 「남북한 방송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정한 컨소시엄도 필요하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전망은 그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거론되었던 여러 가지에 보태어서 몇가지 준비 사항을 점검해본다.

첫째, 남북합의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 경제 교류, 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으므로(제22조), 남북 쌍방의 합의 아래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합의한 대로 남과 북은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구 설치 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합의하기 위한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각 부문별 세부 사안을 정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정경 분리' 원칙에 따른 남북 경제 협력 활성화 조치를 수차례 걸쳐 천명하였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도 이같은 조치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政文 分離'를 과감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 정문 분리를 통하여 남북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나,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지니고 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셋째, 교류 협력은 몇가지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① 단순한 물적 교류로서, 인적인 접촉의 중요성보다 불적인 성과물만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례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조선왕조실록 반입이 그것이다. ② 단순한 인적·물적 교류로서, 남북의 공연물이 남북에서 각각 공연되어 예술인들에 의한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③ 중층적인 인적·물적 교류로서, 남쪽에서 필요한 사회 문화 상품을 북한의 노동력으로 생산하여 반입하는 사례이다. 남북의 사회 문화인이 각기 남북에 일시나마 상주하면서 창작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④ 완결적인 인적·물적 교류로서, 남북한 공연 예술인이 합작으로 작품을 창작하거나, 남북한 영화인이 합작으로 영화를 창작하는 등의 사례이다. 남북한이 고전 국역을 공동으로 벌여서 공동 출판하거나 한쪽의 출판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각각의 교류 방식은 모두 나름의 의의가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교류는 단순한 교류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⑤와 같은 단계에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현실적인 남북 교류 협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남측에서라도 먼저 솔선하여 북측의 사회 문화적 성과물을 과감하게 재창작할 수 있게 하는 자신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이 북측에 대하여 개방을 촉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남측이 지니고 있지만 북측이 없거나 빈약한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일방적인 교류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 가령 애니메이션 등의 산업에서 북의 노동력을 교육시키고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이 처한 입장에서 '강냉이 지원'만으로 완결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사회 문화적 지원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우리에게 과연 '남북 사회 문화 교류 전문가' 집단이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본다. 가히 대대적인 남북 교류도 어느 지점에서는 예상할 수 있다. 막상 그 단계에 가면 대단히 서서히 남북의 고리가 풀리는 방식이 아니라, 생각 이상으로 전면적으로 풀려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할 때, 각 분야마다의 '북한 전문가'가 일시에 요구될 것이다. 상호간 이해 폭을 넓히고, 장애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외교력있는' 전문가의 배출이 대비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그러한 전문가 집단의 힘에 근거하여 통일 사회 문화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남북 사회 문화 교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 자체를 범죄시키는 냉전적 법령을 개폐해야 한다. 언론 보도의 장애물인 안기부의 '특수 자료 취급 지침'(1998. 1)도 폐지되어야 한

다. 문화제법을 위시한 제반 법규에서 남북 교류를 대비하는 준비가 되고 있는가를 모색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남북한의 '문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강구해야 한다.

일곱째, 남북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이 잘 되고, 또한 협력의 성과가 제대로 결실을 맺으려면, 올바른 통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동안의 통일 교육은 국가 주도의 일방통행 방식이었고, 민간의 전향적인 통일 교육은 지원은 고사하고 탄압의 대상이었다.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통일 교육으로 변신을 모색해야 한다. 교과 과정 내에서의 통일 교육을 올바르게 수행해야 하며, 민간 통일 운동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기관을 지원하여 통일을 대비한 역량있는 일꾼을 길러내야 한다. 올바른 통일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반공 교육'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의 현존 교육체계로는 전민족적인 화합을 준비할 수 없을 것이다.

여덟째, 남북 사회 문화 교류를 전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 및 민간 조직이 출현해야 한다.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봄직하다.

가칭 남북사회문화교류재단을 재단 법인 형태로 발족시켜야만 한다. 남북 사회 문화 교류의 정보를 공유하고, 불필요한 경쟁 등을 배제할 수 있는 단위로 민간 법인 형태의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남북사회문화교류위

원회를 적극 가동시켜 전문가 집단의 '씹크 탱크'를 다원적으로 조직해야 할 것이다. 여성특별위원회에 남북여성교류위원회 등을 신설하여 NGO 여성 단체들을 조직화시킴으로써 이북의 여성 단체와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남북여성연대를 구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의 청년 학생들이 사회 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음을 고려하여, 남북 사회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주고, 문호를 열어주어야 마땅하다. 민간 통일 운동 진영 내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도 고려해볼직하다. 가령 통일 문예를 위한 네트워크 문제, 통일 언론을 위한 네트워크, 남북의 생태 환경을 생각하는 네트워크 등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해외의 사회 문화 단체와 남북의 사회 문화 단체를 연계하는 문제도 생각해볼직하다. 통일 사회 문화 교류에 관한 한, 통일부 및 연관 기관은 대개 정치 경제에 부수적인 2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개의 기관에는 정치·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되어(정확하게 말하면 독점) 있으며, 심지어 북한학과 같은 전문 교육 기관에도 사회 문화 전문가는 드물다. 문화관광부같이 사회 문화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에

는 반대로 북한 내지 통일 전문가가 드물뿐더러 통일 사업의 경험도 일천하다. KOTRA에서 대북 경제 교류 정보를 관리하듯이, 별도의 독자적인 남북 사회 문화 교류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통일 경제 연구소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에 관한 나름대로의 정보를 축적시켜야만 한다.

정부는 모든 통일 논의를 정부 출연 국책 기관 등에서 전담하려는 발상을 전환시키고 민간으로 이양시켜야 한다. 사회 문화 분야는 그야말로 '관료적 발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정책적 마인드'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민간 통일 운동 분야로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정책 방안을 위임하고 정부는 이를 수렴하는 역할로 돌아서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 문화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풍조 가운데 하나는 남북한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의 모델을 독일의 사례에서 구하려는 안일함이다. 독일은 우리에게 여러 점에서 선발주자로서의 예증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독일은 한반도와 다르다. 남측에 알지 못르게 자리잡은 '서독 모델'은 이미 '남한=서독'이라는 등식 속에서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논리를 제공해주고 있다.⁶⁾ 그렇다면 '북한=동독'이란 등식도 가능한 것일까. 한반도의 실

6) 송두율(1995), 「역사는 끝났는가」, 당대.

정에 부합되는 사고를 해낼 수 있는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길러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아홉째,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언론 보도의 자세이다. 언론 보도가 편향성을 보여주거나 끊임없이 반복적인 자세를 견지할 때, 공들여 쌓아올리는 남북 교류 협력의 성과물들이 일거에 사라질 수도 있다.⁷⁾ 더욱이 반복의식을 고취시켜 득을 취하려 하는 맹목적인 언론 보도 태도가 있다면, 이를 제어시킬 사회 운동이 필요하다. 언론인들은 3년 전 공표된 바 있는 ‘평화 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⁸⁾’을 반드시 지침으로써 남측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물론, 북측의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⁹⁾

열번째, 남북 사회 문화 교류 역시 중앙과 중앙 단위를 넘어서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북한의 지방을 연계하는 방식의 문화 교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통일된 사회는 지역간·도농간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전제로 한다면, 교류 협력에서도 지역간 교류는 필수적

이다.¹⁰⁾

맺음말

통일은 21세기의 민족사적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21세기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한민족의 미래를 구상하는 모색의 과정이며, 지난 20세기의 지난했던 억압과 굴종의 역사를 벗어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강제하고 간섭하는 외세로부터 자주성을 확보함으로써 한민족공동체의 존엄을 살리고 명실상부한 민족 국가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민족의 동질성을 논할 때 가장 본질적인 분야이기도 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망은 통일 과정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의 우리가 꿈꾸는 모델을 세우는 데도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통일 사회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통일 국가 내에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내일의 문제이기도 하다. **92**

7) 이영희(1997), “통일과 우리 방송 저널리즘의 한계”, 『남북한역 사회·문화·경제·정치적 통합과 방송』, MBC통일문화연구소.

8) 언론 3단체(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1995년 8월 15일 공동 발표.

9) 1985년 예술단 교류가 있을 뒤에 남북한의 보도 태도를 보면, 교류의 성과가 오히려 남북 화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잘 보여준다. 남에서는 획일적·통제적·정치적·비예술적 공연으로 평가 절하하였으며, 북에서는 ‘미국 문화의 예속이며, 복고주의’라고 평가 절하하였다.

10) 기사연통일연구위원회(1994),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p. 319